

새정부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충남의 도시재생 방향

송두범 · 임준홍 · 윤정미 | 충남발전연구원

1. 서론

인구저성장시대¹⁾, 녹색성장시대의 도시정책의 큰 흐름 및 전략은 도시재생이다. 이에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 도시재생시스템연구²⁾가 본격화되었으며, 새정부도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서도 대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중소도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소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자산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이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서 도시재생은 중요하다. 이에 지난 12월 15일 새정부는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에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재생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자립적 지역 발전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³⁾

본 연구는 16개 중소도시로 구성된 충남의 쇠퇴상태와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성격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과 시·군의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1)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2018년을 정점(49,340천명)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하고 있으며(통계청, 2007.5,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p.5 참조), 129개 지방 중소도시 중 106개 도시가 5년 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이미, 인구감소기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음
- 2) 참여정부는 '삶의 질' 향상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건설교통 R&D 육성을 위해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VC-10)」을 작성하고, 향후 10년간 6조5천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 10대 과제에는 '도시재생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시스템' 연구에는 크게 4개의 핵심과제가 있으며, 이 중 제1핵심과제에 '지방 중소도시 유형별 재생기법개발(1-1세부과제)'이 주요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이 주연구기관으로 수행 중에 있음
-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12.15,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발표」 보도자료 참조

II.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도시재생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중앙부처간 이해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소액·중복투자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과 지역 간의 협력

및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간 상생구도와 지역별 특화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자체 개발한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포괄적 재정지원⁴⁾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평가와 재정·사업을 연계한 전략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표 1〉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특징

구 분	중전 지역발전정책(AS-IS)	신지역발전정책(TO-BE)
목 표	· 지역간 대립구도 · 산술적·기계적 균형화	· 지역간 상생구도 · 지역별 특화발전
사 업	· 기존 보존사업의 승계 - 다양한 성격 사업의 혼재 - 사업의 과도한 세분화 - 유사중복 사업 · 형식적, 분산적 낙후지역사업	· 지역발전사업으로 재편 - 부적합사업의 이관 - 사업성격별 통합, 정비 - 유사사업 사업군화 · 실질적, 체계적 낙후지역사업
추진체계	· 중앙부처 중심 - 중앙→시·군 · 지역혁신협의회 기능 미약 - 협의기능 중심 · 행정구역 단위 추진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중심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시·도 ·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 - 지역거버넌스의 중심기능 · 자치단체간 협력·상생 촉진
예산·재정구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사업유형별 계정구분 - 지역혁신계정/지역개발계정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권역유형별 계정구분 - 광역발전계정/지역개발계정
지원방식	· 개별사업별 보조 · 사업별 중앙부처 사업배정 · 획일적 지원	· 사업군별 포괄보조 · 사업군별 지자체 사업선택 · 차등지원
평가방식	· 형식적 평가 - 평가 환류 미흡	· 전략평가 - 평가와 재정·사업 연계

자료 : 조기현, 2008.11,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p.36 참조

4) 새정부는 균특회계 재원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200여개 지역개발사업을 21개로 통합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권적 지역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새정부의 기초생활권 추진계획 5대 실천 전략 중 하나인 “시·군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부분을 보았을 때,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간 협력과 상생이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에서 중소도시재생에 대해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정비, 구도심재생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자립적 지역발전 거점 조성과 대도시 연계 통합개발 및 자족적 발전이 가능한 시·군의 구시가지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주택정비사업에서 벗어나 문화·주거·복지·일자리 창출이 종합된 복합적·생산적 재생사업의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2009년 중 「도시재생지원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도시재생정책은 목표, 추진체계, 지원방식, 평가방식에서 참여정부와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중소도시재생에 대한 기본방향과 제도적 틀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Ⅲ. 충남 중소도시 쇠퇴 실태

1. 충남 중소도시 현황

충남의 중소도시들은 수도권 중소도시에 비해 인구증감을, 노후주택비(1985년 이전주택), 단위사업체규모, 고령화정도,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등 많은 지표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지방 중소도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16개 시·군별로 2000년 대비 인구변화를 보면 수도권 주변에 위치하여 효과를 강하게 받고 있는 천안, 아산과 계획신도시인 계룡시는 뚜렷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대부분 도시는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대 기업체의 입지는 천안, 서산, 아산 등에 12개와 7개 정도 위치하고 있으나 시·군 9곳은 전혀 입지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천안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충남의 도시들은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에 있는 천안, 아산, 계룡 등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정주환경(인구, 노후주택), 경제기반(사업체규모, 1,000대 기업수), 재생역량(고령화, 재정) 모두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충청남도 중소도시 현황

구 분	인구증가율 (00-05년, %)	노후 주택비(%)	인구대비 중사자(%)	1개 사업체 당중사자수	1000대 기업체 입자수	고령 인구비(%)	재정자립도 (2006년)	재정력지수 (2006년)
중소도시	4.8	21.4	30.1	4.7	313	10.9	27.6	33.7
수도권	15.9	10.1	29.4	5.1	145	7.5	46.2	81.2
지방권	-1.9	28.0	30.6	4.4	168	13.3	23.0	22.3
충남도	2.4	25.1	31.2	4.7	31	14.1	27.5	25.5
천안시	24.9	12.9	34.9	5.4	12	7.2	51.77	69.14
공주시	-2.5	27.7	26.0	4.0	1	16.3	21.76	22.71
보령시	-11.3	32.3	29.5	3.7	0	16.1	24.89	24.9
아산시	15.3	18.7	39.7	7.3	7	11.5	46.46	54.42
서산시	0.7	25.5	28.4	4.5	7	13.4	36.64	25.08
논산시	-8.8	31.3	27.0	3.7	0	17.0	21.34	19.74
계룡시	16.9	6.7	18.4	4.2	0	6.6	28.66	17.92
금산군	-7.5	39.3	34.0	4.0	0	20.7	21.95	17.13
연기군	1.0	30.0	34.2	5.3	1	15.3	27.89	24.43
부여군	-12.2	32.3	23.4	3.6	0	22.2	15.02	14.05
서천군	-13.5	36.7	29.8	3.9	0	23.3	15.1	15.7
청양군	-18.9	40.1	26.3	3.7	0	25.5	15.94	10.78
홍성군	-8.7	33.1	25.9	3.6	0	18.5	18.01	16.46
예산군	-16.1	30.8	26.8	3.8	1	19.7	20.02	17.97
태안군	-10.9	36.9	26.3	3.4	0	18.2	38.96	29.18
당진군	-3.7	26.3	30.7	4.6	2	16.5	36.04	27.86

* 중소도시, 수도권,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해당 시·군을 평균한 값임

2. 충남 중소도시 쇠퇴 실태

1) 쇠퇴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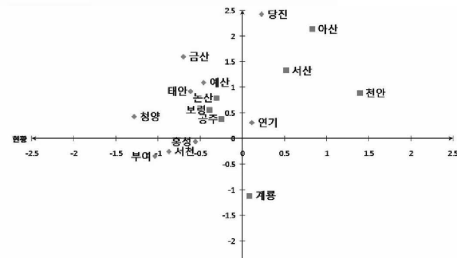
쇠퇴지수⁸⁾를 통해 129개 지방중소도시(특별

시, 광역시, 수도권 제외)의 상대적 쇠퇴실태를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 중소도시는 전술한 개별지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특히, 수도권영향을 받고 있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과 세종도시 건설 영

향을 받고 있는 연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에 반해 홍성, 서천, 부여는 쇠퇴현상이 심각한 3영역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지역

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시이다.

구 분	복합쇠퇴지수	
	현 재	추 세
천안시	1.3953	0.8873
공주시	-0.2477	0.3801
보령시	-0.3908	0.5597
아산시	0.8286	2.1383
서산시	0.519	41.3286
논산시	-0.3050	0.7880
계룡시	0.0843	-1.1248
금산군	-0.7000	1.5941
연기군	0.1130	0.3105
부여군	-1.0377	-0.3437
서천군	-0.8717	-0.2560
청양군	-1.2839	0.4266
홍성군	-0.5568	-0.0608
예산군	-0.4595	1.0901
태안군	-0.6141	0.9208
당진군	0.2275	2.4251



〈그림 1〉 충청남도 중소도시 현황

* 현황 및 추세값은 복합쇠퇴지수 값을 z-score로 표준화하여 획득하였음

앞의 3가지 부문에 대해 쇠퇴정도를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부문에서는 태안, 주택부문에서는 공주, 보령, 논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이, 경제부문에서는 계룡, 홍성이

상대적으로 쇠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특히, 충남지역의 주택노후화 상태는 16개 시·군 중 9개가 3영역에 포함되어 (56.25%),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쇠퇴지수는 인구사회부문, 주택부문, 경제부문의 변수를 이용하여 단순순위화방법을 이용한 표준화와 요인분석을 통한 가중치를 통해 쇠퇴지수를 산정하였음. 쇠퇴정도를 위한 사분면 분석은 z-score 방법을 통해 현재측과 추세측으로 구분하여 각 도시별 분포를 본 것임. 예를 들어, 사분면 구분에서 저3영역에 위치한 도시, 현재의 쇠퇴상태가 심각하며, 동시에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쇠퇴정도가 심각한 도시(도시재생사업단 1핵심과제 1-1 세부과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분석한 결과임)

〈표 3〉 충청남도 중소도시 현황

구 분	인구사회부문		주택부문		경제부문	
	현 황	추 세	현 황	추 세	현 황	추 세
천안시	0.0250	-0.2318	0.0102	0.9463	1.5773	0.9765
공주시	-0.0003	0.1245	-0.0068	-0.4639	-0.2738	0.7513
보령시	-0.0091	0.5799	-0.0085	-0.723	6-0.1330	1.3811
아산시	0.0159	0.5832	-0.0069	0.4082	1.6884	1.7592
서산시	0.0054	0.1236	-0.0009	0.2598	0.9140	1.5499
논산시	0.0065	1.8962	-0.0197	-2.1153	-0.1112	1.3466
계룡시	0.0289	-1.3982	-0.0025	0.0557	-0.5813	-0.2472
금산군	-0.0091	1.1729	-0.0224	0.2598	0.1844	1.3084
연기군	0.0056	0.4756	-0.0098	-0.4824	0.7603	0.2907
부여군	-0.0196	0.2922	-0.0115	-0.8164	-1.0282	0.2674
서천군	-0.0238	0.6225	-0.0137	-1.3360	-0.2890	0.9788
청양군	-0.0249	0.2658	-0.0039	-0.6309	-0.8916	0.9520
홍성군	-0.0077	0.9743	-0.0186	-0.0371	-0.8110	-0.0041
예산군	-0.0080	0.8486	-0.0048	-0.0186	-0.4306	1.4862
태안군	-0.0075	-0.6342	-0.0098	1.1875	-0.5289	0.5638
당진군	0.0066	1.3928	-0.0128	0.0928	1.0751	2.1491

2) 쇠퇴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충남의 중소도시들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쇠퇴·침체를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 중소도시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충남의 중소도시에 대해 전문가(공무원) 의식조사⁶⁾ 결과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정체와 쇠퇴를 우려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성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6) 3가지 부문에서 인구사회부문에 이용한 변수는 노령화지수, 순이동률, 평균인구성장률, 1000명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1000명당 소년소녀가장가구원수, 1000명당 시설학원수, 지역가입자보험료(2005년)이며, 주택부문에 이용한 변수는 공가율, 노후주택비율이며, 경제부문에 이용한 변수는 1인당 지방세징수액(천원), 유형자산 연말잔액(백만원), 1000명당 중시자수, 사업체수당중시자수, 재정자립도임

7) 설문조사는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시쇠퇴 유형별 재생기법 개발'을 위해 충남, 강원, 전북, 경북 등 62개 시·군의 도시계획, 지역경제, 관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25일 동안 방문, 우편, E-mail, 팩스를 통하여 배포하였으며, 총 655부를 회수한 것 중 충남의 경우만을 분석한 것임(설문조사 통계값은 이하 동일)

〈표 4〉 도시변화에 대한 의식

구 분	매 우 쇠퇴	쇠 퇴	약 간 쇠퇴	정 체	약 간 성장	성 장	매 우 성장	전 체	Chi-Square	
현재	시급도시	-	3.4	3.4	13.8	37.9	34.5	100.0	7.078 (.314)	
	군급도시	5.3	5.3	5.3	36.8	21.1	15.8	100.0		
	전체	2.1	4.2	4.2	22.9	31.3	27.1	8.3		100.0
미래	시급도시	-	3.4	-	13.8	37.9	34.5	10.3	2.590 (.763)	
	군급도시	-	-	5.3	15.8	36.8	36.8	5.3		100.0
	전체	-	2.1	2.1	14.6	37.5	35.4	8.3		100.0

〈표 5〉 도시내에서의 주요 쇠퇴지역

구 분	구도심 상점가	도심의 주거지	일반 주거지	산업단지 주변지역	도시 전체	기타	전체	Chi-Square
시급도시	55.2	13.8	6.9	3.4	3.4	17.2	100.0(29)	11.064 (.050)
군급도시	42.1	10.5	21.1	-	26.3	-	100.0(19)	
전체	50.0	12.5	12.5	2.1	12.5	10.4	100.0(48)	

도시에서 가장 쇠퇴를 우려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구도심 상점가이며, 그 밖에 도심의 주거지와 인접한 일반주거지역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쇠퇴 원인에 대해서는

주변도시의 성장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였고, 기반산업 약화,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원인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 부족도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6〉 도시쇠퇴의 원인(제1원인)

구분	교통신 발달	주변 도시 성장	개발 토지 부족	공공공간 부족	환경 오염	기반 산업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상업 서비스 기능 약화	토지 및 건물 가격 상승	편의 시설 부족	교육 서비스 부족	전체	Chi-Square
시급도시	6.9	51.7	-	3.4	6.9	13.8	6.9	-	-	6.9	3.4	100.0(29)	22.243 (.014)
군급도시	10.5	5.3	5.3	-	-	26.3	15.8	5.3	10.5	-	21.1	100.0(19)	
전체	8.3	33.3	2.1	2.1	4.2	18.8	10.4	2.1	4.2	4.2	10.4	100.0(4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적 지표와 중소도시의 상대적 쇠퇴정도 비교, 공무원 의식조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천안, 아산, 서산 등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도시를 제외하고는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성장하는 도시마저도 도시내부쇠퇴를 염려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구도심내 상점가, 주거지 등의 쇠퇴를 우려하고 있었다.

IV. 충남의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대응 전략

1. 기본 방향

도시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산업경제 육성과 주거여건 개선을 들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

을 기본적으로 인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재생정책에서는 해당 도시가 갖고 있는 비전과 미래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특히,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성격과 지방 도시 재생사업의 기본적 방향을 명확히 이해한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발굴이 요구되며, 그 기본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은 지역 경쟁력강화, 일자리 창출,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민의 자율성·창의성에 기반을 둔 개성 있는 도시재생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민, 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

(표 7) 도시쇠퇴 극복을 위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제1순위)

구 분	산업경제육성	문화관광기반조성	도시의사회문제개선	주거여건개선	법·제도지원	전 체	Chi-Square
시급도시	55.2	10.3	3.4	24.1	6.9	100.0(29)	6.335 (.175)
군급도시	78.9	-	10.5	10.5	-	100.0(19)	
전체	64.6	6.3	6.3	18.8	4.2	100.0(48)	

여야 한다.

셋째, 지역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광역경제권 체계에서 대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고 기능을 강화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도시간·지역간 경쟁은 폐쇄적 국내경쟁이 아니라 지역간 협력화, 공동화, 규모화를 통해 개방적·국제적 지역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2. 대응 전략

1)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창조적 도시 재생사업 발굴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의 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발전과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발전, 지역간 협력,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도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미래상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주와 부여, 홍성 등 역사문화자산이 풍부한 지역은 역사문화·디자인을 활용한 창조적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연기, 홍성, 예산, 태안 등에서는 세종시, 도청신도시, 기업도시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및 구

도심재생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자산과 연계한 재래시장 경쟁력 재생사업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개개의 시·군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단기간 내 적용 가능한 창조적 도시재생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2)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은 국가차원에서는 높지만 아직까지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추진체계 구축 및 대응전략은 미흡하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자치단체는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과 등을 설치하고, 자치단체 산하의 공사에 도시재생본부, 도시정비팀 등을 두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단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만이 뉴타운사업단을 설치하고, 경기도시공사에 뉴타운사업처를 설치하여 사업위주로 대처하고 있을 뿐 충청남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조직개편 등 적극적인 대처는 미흡하다.

충청남도에 속한 시·군단위에서는 천안과 아산이 도시정비팀, 도시재개발팀, 원도심개발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이 있을 뿐이다.

중앙정부는 2009년 시행을 목표로 「(가칭) 도시재생지원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 도시재생정책의 구체화 및 사업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재생 관련 재정 지원은 지금과 같이 각 부처 세부사업별 승인 및 소액지원방식에서 '포괄적 재정지원'을 통해 자치단체가 세부사업을 직접 기획하도록 하고 있어 부서간 협조는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시·군간 협조도 중요하다.

이에 충청남도과 시·군은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질 조직은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성격상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세부사업 중심의 하나의 부서 단위가 아닌 도지사나 부지사, 시장이나 부시장 차원에서의 조직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재생사업의 발굴에 있어서 인접한 도시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충청남도는 이를 위한 조정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역간·도시간 협력 강화

흔히 지금의 시대를 도시간·지역간 경쟁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저성장시대, 인구감소시대에는 도시간 경쟁 못지않게 협력·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 개발 정책 등 지역간 협력·연대를 강조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역량, 협력에 따라 재정 지원은 더욱 뚜렷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에는 도시간 네트워크 협력체계가 보다 강조되고 있어 이와 연계된 도시재생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천안·아산의 연계를 강화하여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종시, 도청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연기, 홍성·예산, 태안, 아산 등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침체, 신도시개발의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V. 결론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도시정책과 도시재생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발표에서 중소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 재생 등을 종합 추진하여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자립적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시범사업 등 실천계획도 제시될 것이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지역발전정책이 중앙주도가 아니라 지방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요구된다.

실제 충남의 도시 중 천안, 아산 등 수도권권 효과를 받고 있는 몇몇 중소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는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충남의 지역발전, 도시의 질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우선 충남 중소도시의 실태와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도시 미래상과 연계된 중소도시재생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밀착형 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시·군 및 주민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지역의 자산과 특성을 살린 지역에서부터의 계획 수립과 시책·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것이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조직구성과 지역 연구원, 대학 등과 협력하면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생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재생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12.15,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발표」 보도자료
2. 관계부처합동, 2008. 12. 15,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 충남발전연구원 외, 2008.11, 중소도시재생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안)
4. 조기현, 2008.11,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5. 김용홍, 2008.1,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과제, 국토정보
6.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2005, 통계청
7. 주민등록인구, 2005, 통계청
8.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5, 통계청
9.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7.5, 통계청
10. 2005년 한국도시연감, 2006, 행정안전부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2006 지방재정분석자료
12. http://finance.naver.com/coinfo/1000_list.php(매출액 1000대기업), 2007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총론적으로 살펴본 것으로서, 구체적인 도시별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는 쇠퇴실태와 원인분석, 도시의 자원 및 미래상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밝혀둔다.